

경제정책방향

완전한 경제 정상화 +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

2022



대한민국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위기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

PART 1.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

1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	01
	1. 안정적 성장흐름 지속을 위한 최적 정책조합(Policy Mix) 운영	
	2. 피해부문 중심의 내수 회복 지원	
	3. 미래대비 투자를 중심으로 기업투자 인센티브 대폭 확대	
	4. 경제회복을 견인해 온 역대급 수출 호조세 지속	
2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05
	1. 소상공인들의 피해극복 및 재도약 본격 지원	
	2.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3. 코로나 고용 이력효과 최소화 및 고용구조 변화 대응 강화	
	4. 부문별 격차해소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등 新양극화 대응	
3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09
	1.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련 근본적·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2. 가계부채·한계기업 등에 대한 철저한 위험관리 노력 지속	
	3.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확실한 하향 안정 도모	
	4. 금융·외환·대외부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도 선제 대비	

PART 2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

4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13
	1. 한국판 뉴딜 2.0 본격 추진으로 성과 확산·대한민국 대전환 가속화	
	2. BIG3, D.N.A., Post-新산업 등 유망 전략산업 집중 육성	
	3. 주력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4. 민간 중심의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5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	17
	1. 탄소중립 본격 이행을 통해 우리경제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	
	2.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및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3.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경제 확산	
	4. 재정·공공부문의 과감한 개혁을 통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 동 브로셔의 세부 내용은 경제정책방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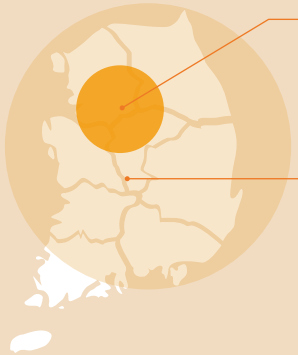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

안정적 성장흐름 지속을 위한 최적 정책조합(Policy Mix) 운영



재정

▶ 적극적 재정기조 + 선제적 집행관리



중앙
총지출 607.7조원*
8.9% ↑

지방
조기집행 목표 상향**
초과세수 등을 통해
추경에 활용

*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 유지(63%)
경기·물가상향 고려 분기별 집행규모 조정
** 상반기 집행목표(% , '21→'22년) :
(지자체) 60.0→60.5 (지방교육) 63.5→64.0



통화

▶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 정도 적절히 조정



코로나19
전개 상황

성장·물가
흐름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금융

▶ 한시조치를 '질서 있게' 정상화 + 연착륙을 위한 보완방안 적극 강구

① 회사채 매입

- SPV 비상기구화(Contingency)
- P-CBO / 회사채 등 차환지원 기능 보강

② 만기·상환유예 연장

- 중소기업 전용 2조원 신규 유동성 공급
-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대출 연착륙 방안

③ 금융규제 유연화

- 만기연장·상환유예 등과 연계한
예대율·유동성 유연화 조치 정상화 검토
- 시장여건 등 감안하여
외환건전성 제도 건전화



방역



의료대응체계
확충



백신접종률
제고



치료제
도입



단계적 일상회복 기반 조성

02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

피해부문 중심의 내수 회복 지원

☑ 피해업종 세제·재정 인센티브 확충

추가소비 특별공제

- ▶ 기존 추가소비 특별공제 1년 연장
- ▶ 전통시장 추가소비 특별공제 신설
 - * '21년대비 5% 이상 증가한 전통시장 소비 / 공제율 10% (기존 추가소비 특별공제 결합시 최대 20% 공제 효과)

상생소비 더하기+

- ▶ 소상공인 등에 일정금액 이상 소비시 추첨 통해 당첨금 지급
 - * 동행세일 전·후 3개월

상생소비의 달

- ▶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 * 최대 월100만원
- ▶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 확대
 - * 10%→최대 15%

☑ 검증된 지원책

☑ 단계적 정상화

소비쿠폰

- ▶ 잔여금 이월로 피해분야 지속 지원

개별소비세

- ▶ 승용차 개소세 인하*
 - * 5→3.5%

국내관광

- ▶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
 - * '22.上, 교통·숙박·유원시설 할인 연계
-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확대
 - * 지자체 3→5곳, 휴가비 40만원 + 지자체 지원
- ▶ 야간관광 활성화
- ▶ 여행구독 서비스 확산

국제관광

- ▶ 무착륙 관광비행 6개월 연장
- ▶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 * 現 5,000불
- ▶ 한국문화축제 조기 개최
- ▶ 외국인 부가세 등 즉시환급 한도 상향
 - * 現200→250만원

소비행사

- ▶ 동행세일(5월초)
- ▶ 코세페(11월)
- ▶ Xmas마켓(12월)

상품권

- ▶ 지역사랑상품권
 - * 국비 15조원
- ▶ 온누리상품권
 - * 3.5조원 규모

03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

미래대비 투자를 중심으로 기업투자 인센티브 대폭 확대

국가전략기술

- ▶ R&D·시설투자시 세제혜택 확대
- ▶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65개 기술 신규 지정
- ▶ 국가전략기술 + 일반제품 생산시 공통시설 세제지원 허용

탄소중립 핵심기술

- ▶ 탄소중립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
- ▶ 수소 등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 지속 검토

정책자금 집중 공급

- ▶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35조원, ~'30년)
- ▶ 국가전략기술 분야 설비투자 특별자금(2조원)
- ▶ 탄소 스프레드 프로그램(5조원)
- ▶ 탄소 넷제로 프로그램(0.3조원)

법·제도 기반 완비

- ▶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 및 시행령 제정, 지원대상 확정 등 후속조치 이행
- ▶ '첨단투자지구' 지정·운영('22.上)
- ▶ 「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 수립

115조원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기업	민자	공공	계
28.0	17.3	64.8	110.1
↓	↓	↓	↓
33.0	15.5	67.0	115.5

건설투자 보완 노력 지속

- ▶ 중소 건설사 자금 및 철근공급 안정화 지원
* 정책자금 6개월 연장 등
- ▶ 공공 공사비 시장가격 적기 반영

04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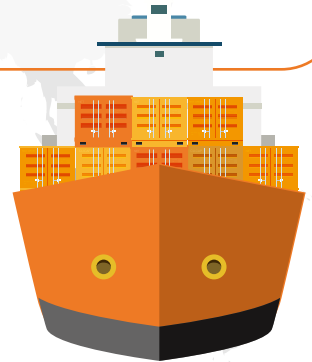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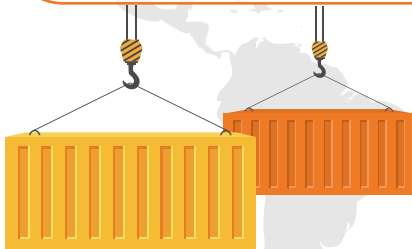
경제회복을 견인해 온 역대급 수출 호조세 지속

국제협력 확대

- ▶ CPTPP 가입 추진을 위한 소통 강화
- ▶ 신남방·중남미·중동 등과 신규 FTA 체결·발효 가속화
- ▶ RCEP 발효(22.2월~) 등 계기,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서류제출 간소화
- ▶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등 거점국가 양자협력 강화

다각적 수출 지원

- ▶ 수출금융 261조원 공급('21년대비 +5조원)
- ▶ '한국형 해운운임지수' 개발
- ▶ 321개 '수출 두드림 기업' 대상 컨설팅·자금·마케팅 등 지원
- ▶ 관계기관 합동 스마트팜 수출지원팀 구성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 총력 지원

선적공간 확보

- ▶ 미주·유럽 항로 임시선박 투입
- ▶ 중소화주 대상 전용선복 제공

물류비 부담 완화

- ▶ 중소 수출기업 물류비 전용 수출바우처(170억원)
- ▶ 물류피해 특별대출, 무역보험·보증 우대 등 특화 금융지원 지속

장기계약 활성화

- ▶ 장기운송계약 체결지원 사업
美 서안항로(300TEU/항차) 대상 지속 운영
- ▶ 민간 주도 장기계약 중개 모델 도입 검토
- ▶ 계약이행 보증상품 개발 검토, 우수포워더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

인프라 보강

- ▶ 부산항 신항 수출화물 임시 보관장소 확충, 신규 터미널 적기 개장
- ▶ 해외공동물류센터(3개소) 구축, 해상운송-현지 내륙운송 연계 지원

01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소상공인들의 피해극복 및 재도약 본격 지원

✓ 소상공인 경영여건이 정상화될 때까지 피해극복 지원

손실보상 지급

- ▶ '21.4/4분기 이후 손실보상 차질없이 지급
- ▶ '21년 집행과정 점검 및 보완방안 지속 강구
- *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 편의 제고 등

경영비용 부담 경감

- 세정 지원**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납부 유예
- 임대료**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 * 폐업 소상공인 임대차계약 해지권 부여
- 보험료 공과금**
 -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3개월 추가 연장
 -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

금융지원 지속

- ▶ 총 35.8조원 저리지금 공급 지속

	대상	규모
희망대출 플러스	100만명	10조원
일상회복특별융자	10만명	2조원
소진자금 일반융자	3만명	2.8조원
자신보 시중은행 융자	100만명	21조원
계	213만명	35.8조원

업종별 맞춤형 지원

- 특별 업종**
 - 여행·관광·공연·전시업 등 지정기간 연장여부 검토
- 항공**
 - 공항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6개월 추가 연장
- 관광·숙박**
 - 대출잔액 한시적 금리 최대 1%p인하

✓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경영생태계 구축

선제적 재기 유도

- ▶ 폐업 전 회복을 선제 지원하는 「경영개선패키지」 신설
- ▶ 소진공 정책자금 연체이자율 인하
- * 6% → 약정이자 + 3%p

원활한 사업정리

- ▶ 컨설팅·법률자문·철거비 원스톱 지원
- ▶ 폐업시 정책자금 회수유보 확대

유망분야 재도전

-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영업자 참여요건 완화 연장
- ▶ 업종전환·재창업지원금 자부담 현물인정비율 상향

아이디어 기반 혁신창업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
- * '21년 15개 → '22년 17개
- ▶ '강한 소상공인' 고도화자금 신규 지원(최대 1억원)

디지털·스마트화

- ▶ 민간의 우수 디지털전환 지원프로그램과 정부 디지털 교육과정 연계 강화
- ▶ 온라인 판로지원 및 구독경제 활성화, 스마트기술 도입 등 지원 지속

02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 주요 품목별 맞춤형 가격·수급안정 대책 추진

석유류·원자재

- ▶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또는 단계적 환원 검토
- ▶ '22년 알뜰주유소 전환시
중소 특별세액감면율 한시 상향
* (소기업) 10 → 20% (중기업) 0~5 → 10~15%
- ▶ 주유소 석유제품 혼합판매 지원 강화
* KRX 석유시장 구매물량 세액공제율 확대(0.2→0.3%),
부당한 차별행위 등 점검
- ▶ 비축유 '정책대여' 제도 운영의
탄력성 제고방안 검토

농축수산물·가공식품

-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1만원)
지속 지원(590억원)
- ▶ 계란 공판장 확산*,
원유(原乳) 가격결정구조 개선안 적용
* '21.12월 2개소(포천·여주) 운영 개시 →
'22년 2개소, '23년 1개소 추가
- ▶ 농축수산물 가격조사(at) 조사대상 및
품목 확대(수산물) 추진
- ▶ 세제·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가공식품·사료업계 부담 완화

공공요금

- ▶ (중앙) 원가 고려 + 자체 비용절감 등 최대한 관리
- ▶ (지방) 공개대상 확대(광역→기초)
+ 우수 지자체는 재정인센티브* 제공
* 균특회계 평가 요소에 반영하여 차등지원

개인서비스

- ▶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지원 강화
* 새마을금고 대출금리 △0.5%p 감면,
지역신보 보증료 감면우대(△0.1→△0.2%p) 등
- ▶ 배달플랫폼 배달비 등 가격정보 제공
* 소비자단체협의회·소비자원 홈페이지 게재(월1회)

✓ 범정부 물가대응체계 확대 개편

장관급 점검체계
(비상경제 중대본)

+

물가관계차관회의

+

물가 부처책임제(신설)

+

물가대책 종합 상황실

✓ 중장기 물가안정 기반 조성

- ▶ 유통구조 개선, 경쟁촉진, 공공요금·수수료 안정,
민간역할 제고 등 구조개선방안 마련

✓ 가계생계비 절감

- ▶ 식료품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부문별 가계생계비 절감노력 강화

03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코로나 고용 이력효과 최소화 및 고용구조 변화 대응 강화

구인·구직 연계 강화

- ▶ 「제1차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 수립
- ▶ 中企 계약학과 내실화 위한 우수기업 참여확대 및 장기재직 인센티브 신설

직접·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 직접일자리 106만개 제공
 - * '22.1월 중 50만명 이상 채용 추진
- ▶ 공공부문 일자리 적극 공급
 - * 국가직 공무원 75%이상 3/4분기까지 채용 확정

직무중심 취업역량 강화

- ▶ 코로나 학번 졸업생 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 인하(△15%p)
- ▶ 기업별 인턴형 일경험 채용한도 상향
 - * 고보 피보험자의 최대 20→40% 채용

취업유인 제고

- ▶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 * 취업성공금 50만원 추가지급 (3개월 이내 취·창업)
-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자 재가입요건 완화
 - * 재가입허용기간 6개월→1년

양질의 민간일자리 확충

- ▶ 고용중대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 취약계층의 민간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장려금 등 지원 강화
 - * 고용촉진장려금 확대,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등



고용안전망 지속 보강

- ▶ 특고·플랫폼종사자 대상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완료
 - * ('21.7) 특고 12개 직종 ('22.1) 쿼서비스·대리운전기사 ('22.7) 기타 특고·플랫폼 / (~'25) 자영업자
- ▶ 취약계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 플랫폼·가사근로자 신규지원, 영세사업장 일용근로자 요건완화(미가입기간 1년→6개월)
- ▶ 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법 제·개정
 - * 플랫폼종사자 보호법,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 ▶ 고용구조 변화를 반영한 고용통계·제도 개편

04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부문별 격차해소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등 新양극화 대응

코로나 격차 신속한 해소

- ▶ 학습 컨설팅 초·중학교 학생까지 확대 지원
- ▶ 저소득 고교 EBS 교재 무상제공 범위 확대
- ▶ 문화누리카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전체로 확대
- ▶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활성화 추진
- * 복직준비 여성을 위한 지원확대 검토, 신원정보 제공
- ▶ 「디지털포용법」 제정 추진

「청년 희망사다리」 업그레이드



주거

- ▶ 전세임대계약시 서류 간소화 등 청년전세임대제도 개선
- ▶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 청년도 무이자 월세대출 지원



자산형성·금융지원

- ▶ 청년소득수준별 3대 맞춤형 자산형성·관리 패키지 본격 시행
-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금 총 한도 및 가산금 요율 하향 조정



일자리

- ▶ 청년 정규직 채용 확대를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
- ▶ 군장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및 원격강좌 제공 확대



성장

- ▶ 디지털 네이티브의 도전·성장·도약을 전방위 지원
- * 디지털분야 취·창업 멘토링, 청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교육 등

부문별 사회안전망 보강

생 계	· 20대 중증장애청년 개별가구 분리로 생계급여 수급허용
의 료	· 근골격계 질환, 치과 분야 등 건보 보장성 확대
돌 봄	· 긴급돌봄 지원대상을 질병·사고 등 위기가구까지 확대
취약 계층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불법행위로부터 서민 재산피해 최소화(3대 패키지)

보이스피싱

- ▶ 진위확인이 용이한 차세대 메시지 도입
- ▶ 피해발생시 통합신고시스템

불법사금융

- ▶ 법률대리·공동소송 지원
- ▶ 대부업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

불법다단계

- ▶ 특별단속기간 운영
- ▶ 비대면 등 신종수법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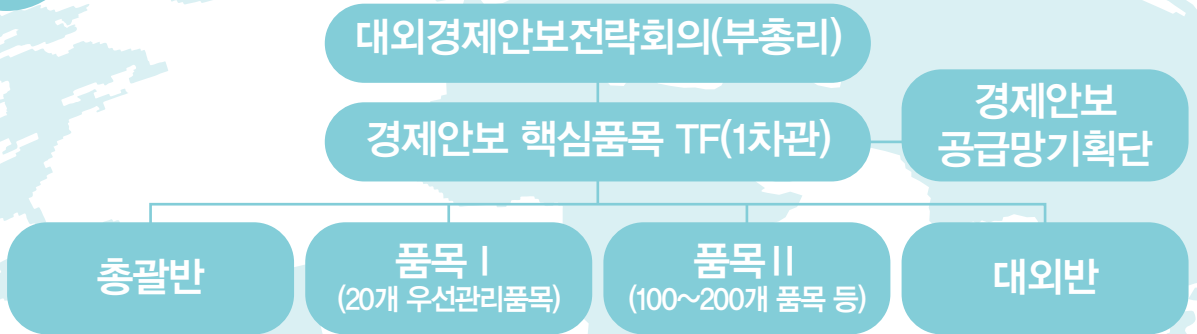
01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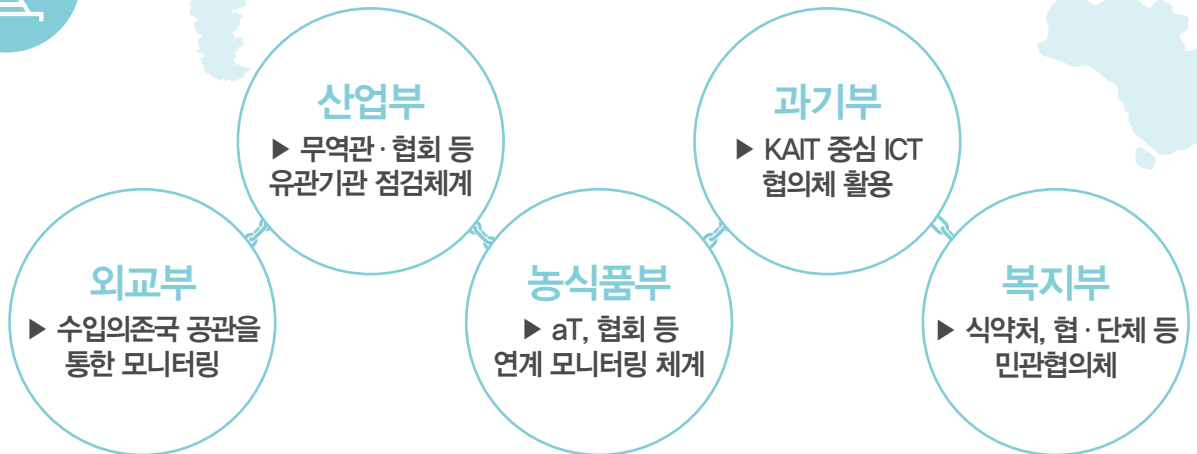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련 근본적·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국가적 차원의 범정부 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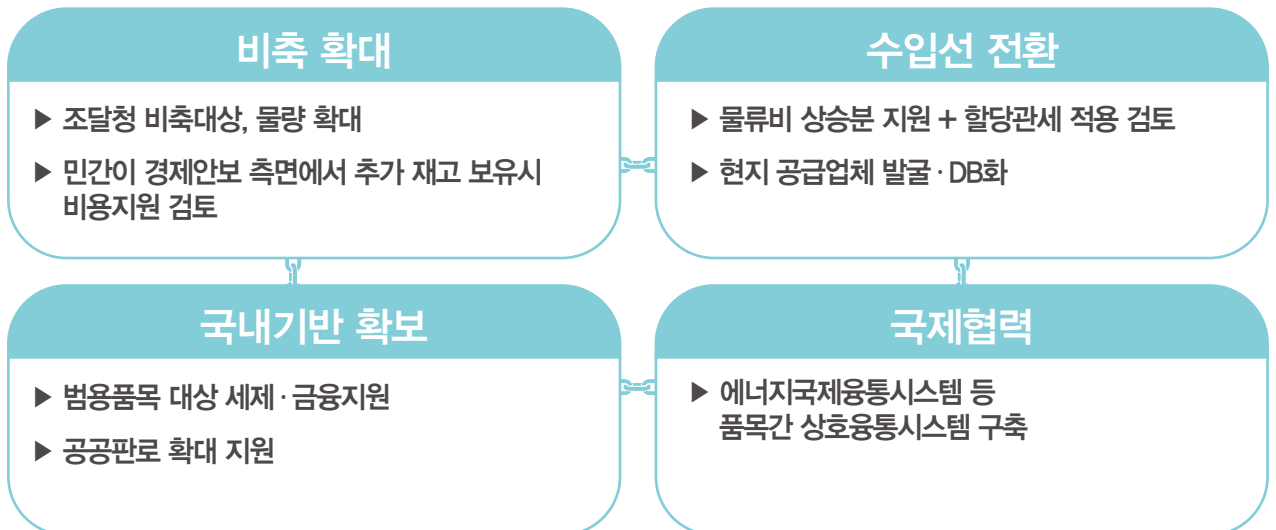


글로벌 수급 위험요인 조기경보시스템(EWS)



경제안보 핵심품목* 맞춤형 안정화 방안

* 국내영향, 대외의존도, 단기시급성, 대체가능성 등 고려 '21년내 100~200대 핵심품목 선정 중, 지속 확대



02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가계부채·한계기업 등에 대한 철저한 위험관리 노력 지속

✓ 가계부채 증가율(4~5%대)을 안정적 관리

부채 총량 관리

- ▶ 차주단위 DSR 2·3단계 순차 시행
 - * (22.1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시
→ (22.7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시
- ▶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인하
 - *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감면기간 6개월 연장
+ 시중은행 자발적 수수료 인하 참여 유도

질적 건전성 제고

- ▶ '22년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조정
- ▶ 신용대출·전세대출 분할상환시 대출한도 확대,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

금리상승기 부담 경감

- ▶ 정책서민금융 10조원 이상 공급, 중금리대출 확대('22년 35조원)
- ▶ 햇살론 대출한도 '22년 한시 상향(+500만원)
- ▶ 차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대출 플랫폼' 활성화
 - * 플랫폼 통한 햇살론 이용시 금리인하
- ▶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 지원
 - * 신청요건 표준화, 금리인하 실적 공시 및 홍보 강화 등

✓ 시장 친화적인 기업 구조조정 기반 강화

- ▶ 일시 조정*되었던 기업 신용위험평가 정상화 검토
 - * ('19년) 연 2회 실시 → ('20~'21년) 연 1회 실시 & 코로나 피해 고려
- ▶ 3차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1조원 이상) + 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 ▶ 시장 자금조달이 어려운 구조조정·사업재편·회생기업 지원 보강

03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확실한 하향 안정 도모

☑ 既 발표 공급대책 가속화

- ▶ 공공정비·도심공공복합*·소규모주택정비사업 후보지 추가 공모 등 후보지 지속 발굴
- * 주민동의 확보지역 중심 3만호 이상 본지구 신규 지정 추진

- ▶ 8.4* 및 2.4대책** 등 신규공공택지, 주요 부지별로 사업계획 수립, 착공 등 신속히 진행
- * 태릉CC, 과천, 마곡, 서울 조달청 부지 가시적 조치 시행
- ** 지구지정 완료, 사전청약 순차 준비 등 추진

- ▶ '22년 사전청약*은 당초 6.2만호에서 6.8만호로 확대 시행
- * 3기신도시, 민간분양, 2.4대책 물량 등 포함, '22년초 상세계획 발표 예정

☑ 부동산시장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

- ▶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 등 집중단속 실시
- * '21년 실시한 지방 저가주택 이상거래·연소자 편법 증여·부정청약 등 조사결과 순차 발표

- ▶ 3.29 투기근절대책 후속조치* 신속히 마무리
- * 부동산 업무공직자 재산등록 상황 심사, 내직원에 대한 연1회 정례조사

- ▶ 일부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귀속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 제도와 본격 추진
- * 민간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간 공동사업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강화

☑ 이중가격 완화 등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 지원 모색

수급 개선

단기공급 확대	▶ '22년 전세대책 물량을 공실임대 활용 등 통해 0.5만호 이상 확대 ▶ 모듈러주택 규제 완화 등 단기 물량 확대
전세수요 분산	▶ 공공자가주택 공급 본격화, 정비사업 이주시기 분산

임차인 지원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공	▶ 1세대 1주택 상생임대인* 양도세 실거주요건 일부(1년) 완화 * 직전계약 대비 5% 이내 상승한 가격으로 신규·갱신계약 체결한 임대인
신규계약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 월세세액공제 공제율(최대 12→15%) '22년 한시 확대
갱신거절 임대인 보호 강화	▶ 갱신거절 임차인의 집주인 실거주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 편의성 제고

04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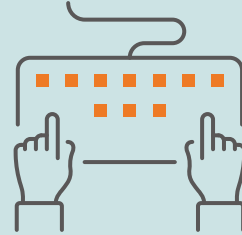
금융·외환·대외부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도 선제 대비

✓ 금융·외환시장 및 대외신인도 관리



- ▶ 금융·외환시장 모니터링 철저
* 거시경제금융회의·외환건전성협의회 등 운영
- ▶ 신평사 연례협의, 해외투자자 설명회 등을 통해
국가신용등급 안정적 유지
* 잠정 : ('22,上) 무디스 연례협의 ('22,下) S&P, 피치 연례협의

✓ 국채 시장 안정화 · 선진화



- ▶ 국고채 시장안정화 조치 적기 수행
- ▶ 국채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위한
『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 마련
* 개인투자용 국채 시행방안 마련, 초장기 선물 신규도입 등

✓ 외환거래체계 개편



- ▶ 외환거래 신고제 단계적 완화로 거래편의 제고
- ▶ 외환 업무 관련 금융업권별 규제합리화 및
타 법령과 정합성 제고
- ▶ 해외투자자 외환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 글로벌 이슈 선제 대응



- ▶ 탄소국경세*, 디지털세 등 국내경제
영향이 큰 이슈에 선제 대응
* 국내산업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양자·다자 협의 강화 + 국내 탄소배출감축 가속화
- ▶ G20, ASEAN+3 등 다자협의체 공조 강화



01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한국판 뉴딜 2.0 본격 추진으로 성과 확산·대한민국 대전환 가속화

디지털

- ▶ (DNA) 데이터기본법 시행령 제정,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도입
- ▶ (비대면) 중기·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 ▶ (초연결)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지능형 메모리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 ▶ (SOC) 도로·철도·항만 디지털 관리

그린

- ▶ (탄소중립) 탄소영향 산정방법 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 ▶ (인프라)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및 그린 리모델링
- ▶ (에너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제도 시행, 미래차(전기·수소) 보급확대
- ▶ (산업) 새만금 RE100 산업, 친환경 투자 금융지원

휴먼

- ▶ (사람투자) 디지털 인재양성 지원 확대, 전국민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 ▶ (안전망) 특고·플랫폼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 ▶ (청년) 3대 자산형성 패키지, 국가장학금 한도 상향
- ▶ (격차해소) 교육회복 종합방안 집중 운영, 전국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지역균형

- ▶ (점검·관리) 중앙·지방점검회의 강화
* 신호등 체계를 도입하여 추진상황 점검 공유
→ 우수 지자체 포상, 인센티브 제공 등
- ▶ (발굴·지원) 지자체간 협력사업, 주민주도형 뉴딜사업 발굴·지원

국민과 성과 공유 & 민간 확산

- ▶ 범부처 성과보고대회 개최
- ▶ 국민참여 뉴딜펀드 추가 조성(2천억원)
- ▶ 민간 인프라펀드 출시 지원

33.1조원
재정투자
+
12대 입법과제
마무리

02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BIG3, D.N.A., Post - 新산업 등 유망 전략산업 집중 육성

✓ BIG3 글로벌 경쟁력 확보



- ▶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 보조금 조정
- ▶ 부품업체 사업재편 지원 등 미래차 보급 기반 구축



- ▶ K-팹리스 밸리(판교) 조성
* 시스템반도체 및 AI반도체 설계센터
- ▶ 차량용 반도체 국가 로드맵 수립



- ▶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3세대 치료제* 등 유망분야 육성
* 디지털치료제, 전자약 등
- ▶ 스마트 임상시험 지원체계 구축,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우대방안 검토

✓ D.N.A. 기반 新시장 창출



- ▶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 ▶ 데이터 수요예보제* 추진
* 기업 데이터 수요를 미리 시장에 안내
- ▶ AI학습용 데이터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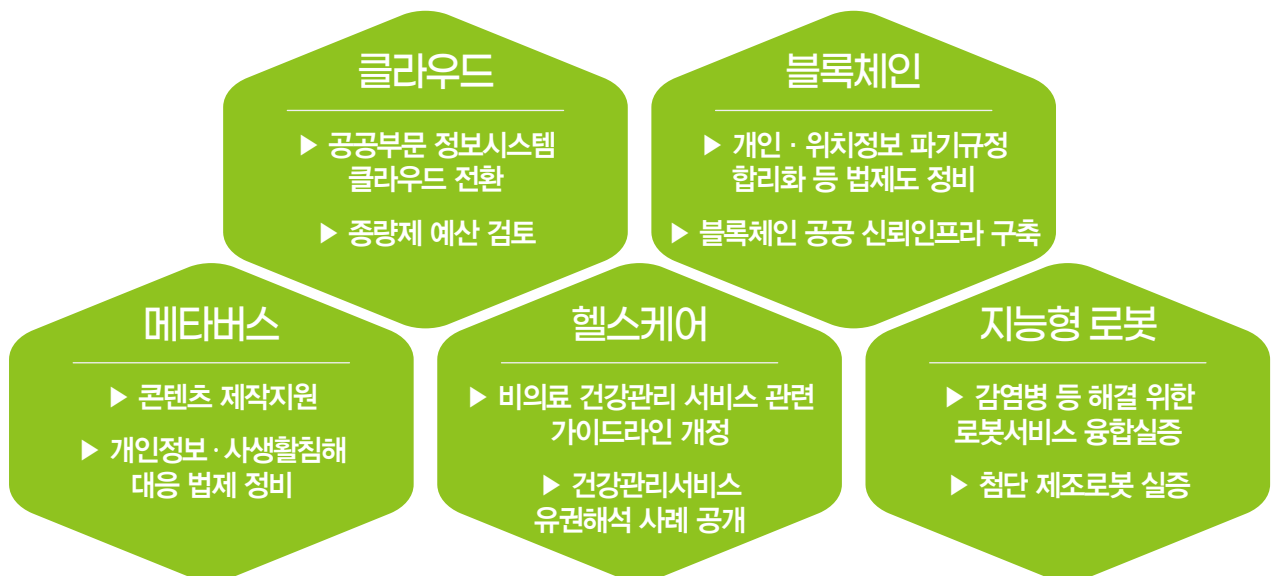


- ▶ 5G 전국망 구축 확대 및 공공 WiFi 고도화
- ▶ 5G융합 5대 핵심서비스* 시범·실증
* 실감콘텐츠, 자율주행차,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 ▶ 차세대 AI 핵심원천기술 확보
- ▶ 한국어 대형 언어모델 개발
* 한국어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전학습된 모델, 연구데이터 등 전면 공개

✓ Post - 新산업 집중육성



👉 유망 신산업 분야 약 66조원 정책금융 패키지 집중 투자

주력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 제조업 혁신 고도화

- ▶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을 위한 AI 제조 플랫폼 모델 확산
- ▶ 스마트 제조혁신 R&D 신설 및 인력 양성
- ▶ 조선업 현장 맞춤형 특화훈련사업 신설을 통해 수주-생산 시차 극복
- ▶ 함정 수주시 보증부담 완화

✓ 소부장 공급망 체질 개선

- ▶ 특화단지별 협력모델 추가 발굴
- ▶ 소부장 으뜸기업 지속 확대
- ▶ 기술난제 극복을 위한 미래기술연구실 및 핵심소재연구단 확충
- ▶ 우수과제 대상 갱신 R&D 도입

✓ 서비스산업 재도약 기반 공고화

-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개편
- ▶ 서비스분야별 新시장 창출 노력



의료

AI 의료SW 보급,
AI 앰불런스 확대



바이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확대,
해양바이오 거점별
산업 활성화



관광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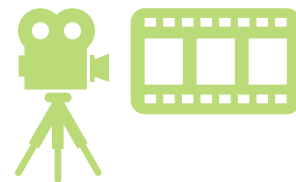


금융

혁신적 금융서비스
신설 및 이용자
보호 강화

✓ 문화 소프트파워 강국 도약

- ▶ 차세대 콘텐츠(OTT 등) 제작지원
- ▶ 콘텐츠 가치평가 모델 추가 개발 및 투자펀드 운영 확대
- ▶ 한류를 활용한 K-브랜드 행사 개최
- ▶ Korea 콘텐츠 위크 확대



04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민간 중심의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벤처·창업 생태계 성숙 촉진

- ▶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스톡옵션 개선 등 제도적 기반 확충
- ▶ 지식서비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실험실 창업 사업화 지원
- ▶ 「K-테스트베드」 운영범위를 확대*하고, 참여기관 평가·보상체계를 구축
- * 신제품 등에 대해 개발-실증-판매까지 지원
-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의 성공사례 창출, '바이오스페이스' 시범조성하여 일반인 창업지원

규제 혁신 가속화

- ▶ 규제 샌드박스 실증결과 안전성 입증된 과제 후속조치 신속 추진
- ▶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으로 사업중단 우려 해소
- ▶ 규제비용 관리제 개선방안 마련
- * 규제비용관리 재설계, 규제혁신평가 반영
- ▶ 한걸음 모델 신규과제 선정 및 사회적 합의도출 절차 등 개선방안 마련

혁신형 인재양성체계 고도화

- ▶ 新기술 20대 분야 혁신인재 약 16만명 양성 추진
- ▶ 기업이 주도, 정부가 비용부담하는 가칭 ASA(Allied Software Academy) 사업 추진
- ▶ 학·석사 연계 패스트트랙 운영
- ▶ 범부처 「인재양성 기본전략」 및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계획 마련
- * 바이오·반도체·배터리 등

기술개발·R&D 역량 강화

- ▶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전략」을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 추진
- ▶ Next D.N.A. 프론티어형 전략기술개발 투자 확대
- * 민간주도 우주시장 확산 지원, 양자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 6G 핵심원천기술 확보
- ▶ 중소기업 R&D 연구비 민간부담률 하향조정 연장
- * 25 → 20%
- ▶ IP 활용펀드 조성 추진

01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

탄소중립 본격 이행을 통해 우리 경제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 '22년 탄소중립 목표이행 원년 5대 후속조치

법·제도	재정지원	감축경로	법정계획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정 ▶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중점분야 11.4조원 투자 ▶ 「기후대응기금」 신설(2.4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수송 등 분야별 법정계획 변경·수립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에너지·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관련 국제기구 신규공여 ▶ GCF 4기 이사진 활동 및 다자논의 참여

✓ 탄소저감 인센티브, ESG, 수소·신재생에너지 등

<h4>탄소저감 인센티브</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 할당계획 변경 검토, 감축노력을 할당시 반영 ▶ 탄소배출 감축실적 재정·금융지원 연계 * 성과연동재정사업, 기후대응보증 신설, 고감축효과기술 예타 신속추진 ▶ 「탄소포인트제」 확대 및 편의성 제고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프로그램(1조원) 신설 ▶ 녹색국채 도입 가능성 검토 	<h4>ESG 확산 지원</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전용펀드」 신규조성 및 모태펀드에 ESG 관점 심사체계 시범도입 ▶ 중소기업 ESG 경영 자가진단 툴 활용도 제고 및 정책자금 지원 연계 ▶ 기존 정보공개 제도와 ESG 공시 간 연계방안 마련 ▶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K-ESG 플랫폼' 기능 강화
<h4>수소·신재생에너지</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전문기업 대상 R&D·컨설팅 등 연계지원 강화 및 인프라 확충 지속 ▶ 마을태양광 시범사업 추진 및 재생에너지 사업 주민참여시 장기 저리 융자 지원 ▶ 한국형 RE100 활성화 * 줄어든 배출량을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 녹색 프리미엄 재원의 중소협력사 지원 활용 ▶ 해양폐기물 탄소중립 실적 계량화 및 블루카본 DB 구축 추진 	<h4>구조전환 대응능력 제고</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구조개편 지원센터」 설치 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활력법, 사업전환법 개정으로 규제특례대상 확대 및 공동사업전환제도 신설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재편 혁신펀드」 조성 노동전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전환지원센터(수요발굴·컨설팅, 분석센터(직무분석·수급전망 등) 운영

02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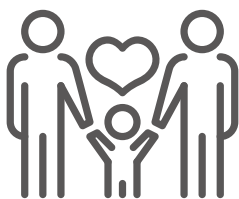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및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 ❶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❷ **영아수당 신설**
* '22년 30만원
- ❸ **첫만남 꾸러미**
* 출생시 200만원
- ❹ **공보육 확충**
* '25년까지 이용률 50%
- ❺ **다자녀지원 확대**
* 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 임대주택 2.75만호 공급

+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유연근무 확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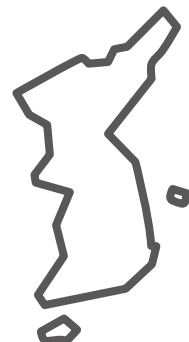
인구정책TF / 인프라 확충

- ▶ 3기 인구TF 핵심과제
 - 인구절벽 충격 완화
* 민간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중장년 전문인력 창업지원 강화
 - 축소사회 대응
* 대학정원 유연화, 1인가구 차별요인 해소
 - 지역소멸 선제 대응
* 지역거점 육성, 생활인프라 공동이용
 - 지속가능성 제고
* 노인돌봄 강화, ICT 활용·재택의료 활성화
- ▶ 4기 인구TF 출범 및 인구 관련 대응체계 개선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 ▶ 종합적인 인구활력계획 수립,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 ▶ 중소·소상공인 밀집지역 중심 선제적·집중적 위기대응체계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신속지원
- ▶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 발굴
- ▶ 3·4차 규제자유특구 25개 사업 법령 신속정비 및 안착화
- ▶ 초광역협력 추진 본격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및 혁신도시 2.0 육성



03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경제 확산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

- ▶ 부처별 협업체계 구축 및 정책추진기본방향 수립
- ▶ 플랫폼 및 IT분야 독과점 사업자 경쟁제한행위 집중 점검

공정 거래질서 확립

- ▶ 국민생활 밀접분야* 부당내부거래 감시강화
* 주택, 난방기기 등
- ▶ 온라인 유통분야, 숙박·여행 등 일상회복분야 거래환경 개선 집중 추진

상생협력 확산

- ▶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자상한기업) 추가발굴 및 우수사례 홍보
- ▶ 성과공유제 확산 및 브랜드화 지원

사회적 경제 / 대화 활성화

- ▶ 우리주변 분야별 대표 사회적경제 사례발굴 및 홍보
- ▶ 경사노위 구성원 다양화 및 경사노위 외 대화채널을 통한 사회적 대화협 노력



04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

재정·공공부문의 과감한 개혁을 통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노동혁신 관련 기업지원

- ▶ 주52시간제 적용관련 세부 분야별 컨설팅
- ▶ 업종별 직무평가 및 임금정보 제공 인프라
- ▶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라인 마련

재정혁신·분권

- ▶ 3대 재정혁신*을 통한 효과성·민주성 제고
* 재정지출 재구조화, 협업예산 고도화, 국민참여예산
- ▶ 2단계 재정분권 후속조치
* 공동사업비제도 도입, 교육교부금 제도개선 검토

혁신조달 확산

- ▶ 혁신 구매 규모 및 제품 수 확대
- ▶ 공공조달 혁신방안 실행계획 마련

국유재산 개발 등

- ▶ 사용료·대부료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 ▶ 국유지 위탁개발과 지자체 도시개발사업 연계

